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윤 유 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68
----------	---------

발의연월일: 2021년 6월 7일

발 의 자: 윤유선, 이충현, 강선영, 송순효,
정정희, 김성한, 김현희, 김용원,
박주선, 경기문, 황영호, 송영섭,
이의걸, 이충숙, 황동현, 최동철,
김병진, 박성호

1. 의결주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임
- 그 동안 제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에서 장기간 계류되었다가 자동 폐기된 실정임
- 제21대 국회에서 152명의 의원이 공동 참여하여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별법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함

3. 주요내용

-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할 것
-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4. 건의문 배부처: 대통령비서실, 국회사무처,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의 무력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우리의 가슴 아픈 과거이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오점을 남긴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 사건으로 군경은 물론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됐고, 여수·순천뿐만 아니라 광양·구례·고흥·보성 등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했다. 암울했던 사건 발생 당시 전라남도 통계를 보면 1949년 한해에만 1만 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희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1월 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인해 여수·순천 일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에 집단 사살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했다.

또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법원은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고 장환봉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의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25 전쟁 전후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또한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여순사건은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5명이 힘을 모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은 지난 70여 년간 여수·순천 시민들과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였던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규명의 실질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2005년 4월부터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여수시와 2012년 12월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순천시의 모든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강력히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시행하라.
1. 정부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라.

2021. 6. 8.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